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7
2014. 6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5.1~5.31)

건축문화 부문

-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우리나라 대표 젊은 건축가를 찾습니다
- 최고의 건축 작품을 가리는 '서울시 건축상' 작품 공모
- 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양도성 탐방' 운영
- 젊고 유능한 '최고' 건축사를 찾습니다!
- 울산시,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 '누구나 누리는 한옥' 건축물·설계·사진으로 공감을 나누어요
-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 야간 산책 나오세요
- 제 3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녹색 건축·도시 부문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구좌읍 동북리에 건설됩니다
-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 광주시, 정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흥천군 선정
-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속 추진
- 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든다!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 인천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 주도로
- 도시 활력 증진사업 적극 추진
- 재해안전도시, 도시계획에 달렸다!
- 1년 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
-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
-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벽화·조형물 체계적 관리 돌입
-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광주시, 도시 경쟁력 높인다
-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마을을 되살리다!
-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19) 손질한다
-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융복합 관광산업 '복합리조트' 추진 탄력

해외건축도시정책동향

덴마크 건축정책(2007)

(auri)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6월호 (통권 17호)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6. 3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정책 Updates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hr/>		
건축문화 부문	8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8	우리나라 대표 젊은 건축가를 찾습니다
	9	최고의 건축작품을 가리는 '서울시 건축상' 작품 공모
	9	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10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1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양도성 탐방' 운영
	11	젊고 유능한 '최고' 건축사를 찾습니다!
	12	울산시,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12	'누구나 누리는 한옥' 건축물·설계·사진으로 공감을 나누어요
	13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 야간 산책 나오세요
	14	제 3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hr/>		
녹색건축·도시 부문	15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구좌읍 동북리에 건설됩니다
	16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17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18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19	광주시, 정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
	2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홍천군 선정
	20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속 추진
	21	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들다!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22	인천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hr/>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4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24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 주도로
	25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꾸요
	26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26	도시 활력 증진사업 적극 추진
	27	재해안전도시, 도시계획에 달렸다!
	28	1년 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
	29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30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한다
	3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
	31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벽화·조형물 체계적 관리 돌입

32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33	광주시, 도시 경쟁력 높인다
34	미래 건축정책 중장기 계획 윤곽 잡혔다
34	우리 동네에 갤러리가 생겨요!
35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36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마을을 되살리다!
37	부산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38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39	소규모학교 공동주택 건립사업 성과 두드러져
39	전남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업무협약
40	가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동북리 지역주민과 협약 체결
40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19) 손질한다
41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42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43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융복합 관광산업 ‘복합리조트’ 추진 탄력
44	민자 공원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 추진
45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 해제
.....	
46	해외건축정책동향 덴마크 건축정책(2007)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 5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총 11개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대표 젊은 건축가를 찾습니다’,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누구나 누리는 한옥 건축물·설계·사진으로 공감을 나누어요’ 등 신진건축가 육성 및 한옥 전문 인력 육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다.

충청북도와 울산광역시에서는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제3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건축문화 기반 공공디자인 관련 행사소식을 전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및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총 9개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으며, 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시범사업, 신재생 에너지설비사업, 에너지 절감기준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강원도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흥천군 선정’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재해·안전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 및 시책 28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안전도시, 도시계획에 달렸다’, ‘국토부, 전국 PEB 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등 범죄·재해·안전과 관련한 사업 및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남도, 주민주도로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전북도, 도시 활력 증진사업 적극 추진’,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벽화·조형물 체계적 관리 돌입’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사업을 중점 발표했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5월,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주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8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21건(43.8%),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7건(56.3%)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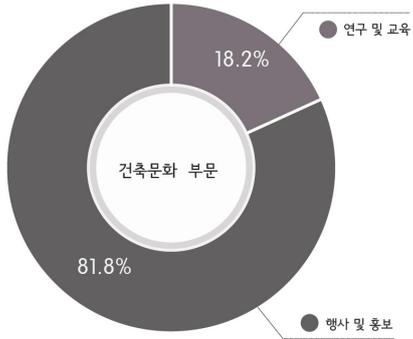
4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자료 21건(43.8%) 중 12건(25%)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자료로, 국토부가 11건(22.9%), 해수부가 1건(2.1%)의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부 4건(8.3%), 문체부 2건(4.2%)의 발표로 총 6건(12.5%)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부 2건(4.2%), 환경부 1건(2.1%)의 발

표로 총 3건(6.3%)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다.

총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27건(56.3%) 중 16건(33.3%)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8개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부문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6개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건(2.1%)씩 6건(12.5%)의 정책 사업을 발표했으며,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서울, 울산, 인천, 충북 4개 광역·지자체에서 5건(10.4%)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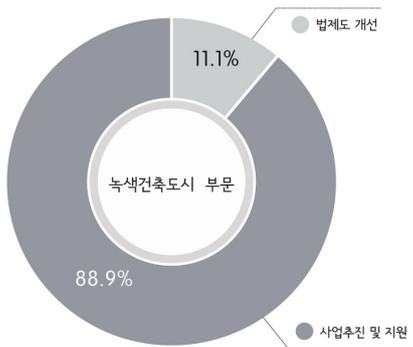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4(8.3%)	2(4.2%)	11(22.9%)	17(35.4%)
문화체육관광부	2(4.2%)	-	-	2(4.2%)
해양수산부	-	-	1(2.1%)	1(2.1%)
환경부	-	1(2.1%)	-	1(2.1%)
합계 (중앙부처)	6(12.5%)	3(6.3%)	12(25%)	21(43.8%)
강원도	-	1(2.1%)	-	1(2.1%)
경기도	-	-	1(2.1%)	1(2.1%)
광주광역시	-	1(2.1%)	1(2.1%)	2(4.2%)
부산광역시	-	-	4(8.3%)	4(8.3%)
서울특별시	2(4.2%)	1(2.1%)	3(6.3%)	6(12.5%)
지방자치단체	1(2.1%)	1(2.1%)	-	2(4.2%)
인천광역시	1(2.1%)	1(2.1%)	-	2(4.2%)
전라남도	-	-	2(4.2%)	2(4.2%)
전라북도	-	-	1(2.1%)	1(2.1%)
제주특별자치도	-	1(2.1%)	3(6.3%)	4(8.3%)
충청남도	-	-	1(2.1%)	1(2.1%)
충청북도	1(2.1%)	-	-	1(2.1%)
합계 (지방자치단체)	5(10.4%)	6(12.5%)	16(33.3%)	27(56.3%)
총 계	11(22.9%)	9(18.8%)	28(58.3%)	48(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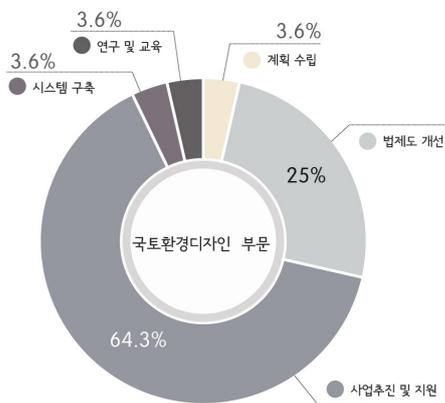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별 동향으로, 5월 발표 자료 중 가장 중점 발표된 부문은 전체 발표자료 48건 중 28건(58.3%)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8건(37.5%),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7건(2.1%), ‘계획수립’,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1%)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총 11건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2건(4.2%),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9건(18.8%)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8건(16.7%),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1건(2.1%)으로 총 9건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5월 한 달간 중점 발표된 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26건(54.2%),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0건(20.8%)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이밖에 ‘법·제도 개선’ 분야 8건(16.7%), ‘연구 및 교육’ 분야 3건(6.3%), ‘계획수립’ 분야 1건(2.1%)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1(2.1%)	1(2.1%)
법·제도 개선	-	1(2.1%)	7(14.6%)	8(16.7%)
사업추진 및 지원	-	8(16.7%)	18(37.5%)	26(54.2%)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2(4.2%)	-	1(2.1%)	3(6.3%)
행사 및 홍보	9(18.8%)	-	1(2.1%)	10(20.8%)
총 합계	11(22.9%)	9(18.8%)	28(58.3%)	48(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14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및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6월 27일(금)까지다.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조체계 등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및 3차 현장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2014년 8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공모 내용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홈페이지(www.goodpla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수사례 부문’과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공디자인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찾는 ‘우수사례 부문’의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6월 27일(금)까지고, 공공디자인으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의 공모 접수 기간은 7월 14일(월)부터 8월 22일(금)까지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최종 결과는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예비 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공모 내용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홈페이지(www.

kcdf.kr/designaw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07.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리나라 대표 젊은 건축가를 찾습니다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4년 ‘젊은 건축가상’ 작품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4년 ‘젊은 건축가상’이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문체부가 2008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상’ 시상상은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를 선정해 그들의 국·영문作品集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건축 문화 스타’를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젊은 건축가’ 작품 공모에는 국내의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만 45세 이하의 건축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건축가는 1개 이상의 준공 작품을 포함한 계획안(포트폴리오)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에 드러난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5인 내외의 젊은 건축가를 선정한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되면 시상과 함께 국내외의 작품 전시 및 젊은 건축가의 해외교류 참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공공건축가로서 국내외 활동에 지원을 받게 된다.

2014.05.08.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고의 건축작품을 가리는 '서울시 건축상' 작품공모

올해에는 건축전문 중 리모델링 부문 신설해 허물지 않고 고쳐 쓰는 건축의 중요성 반영

올해 32회째를 맞는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 서울시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일반 작품공모 대상은 주거(소규모/중대규모), 비주거(공공/민간), 건축전문(한옥/녹색건축물/공간환경/리모델링), 건축명장 등 4개 부문으로, 특히 올해에는 건축전문 중 리모델링 부문을 신설하여 도시관리 시대에 허물지 않고 고쳐 쓰는 건축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총 3번에 걸친 심사를 통해 7월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서류 심사(공모된 작품 중 25작품 선정), 2차 공개발표 심사(상위 12작품에 대한 건축가의 PT 발표를 통해 5작품 선정), 3차 현장답사 심사(대상 1작품 선정)를 거친다.

시상은 주거, 비주거, 건축전문, 건축명장 및 대학생 부문과 올해의 우수 건축가(추천) 등 총 6개 부문에서 대상 1, 최우수상 5, 우수상 25에 대해서 이뤄진다. 시상식은 2014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10월 20일 예정)과 더불어 진행되며, 수상작은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중 전시된다.

수상 건축가 및 건축명장에게는 서울시 건축상 상장이, 해당 건축주에게는 건축물 부착용 기념 동판이 수여되며, 수상 건축가에게는 향후 건축 관련 외부위원 및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에는 특히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공감건축상(특별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공감건축상은 2차 공개발표 심사 대상인 상위 12작품에 대하여 서울 시민이 직접 투표한 결과로 선정되며, 1차 심사 결과가 공표되는 6월 17일(예정)부터 약 1달 간 인터넷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선정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차 공개발표 심사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이 후보 건축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건축상의 대학생 부문인 SAF(Seoul Architecture Festival)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공감의 도시건축, 서울광장 계획' 주제로 같은 기간에 공모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 수상자들은 7월에 예정된 1박 2일의 건축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 워크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들로부터 발전된 결과물들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건축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의 다양한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좋은 건축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5.08.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올해 한옥건축 전문 인력 250명 키운다!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인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모절차로 선정한 총 7개의 우수 교육기관(3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옥설계과정은 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계명대 등 총 4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은 (사)한옥문화원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주)한옥과문화가 각각 맡아 교육하게 된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작년까지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한옥의 산업화·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옥설계교육에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명지대, 전북대 운영)을 추가하고, 시공교육기관을 전년도 1개에서 2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이 미래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5.12.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대상 사업의 기획 아이디어, 디자인 콘셉트 등에 참신한 시각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공설계시장에 신진건축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본 아이디어 공모는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설계공모와 달리,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기획 아이디어 및 디자인 콘셉트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한 착안점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 대상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 부산 금정구의 옹벽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사업

구분	주요 공모 착안점
등명초등학교 효평분교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사업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 △ 사업계획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구서초등학교 옹벽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인접 옹벽을 적극 활용한 주변 도시경관 개선 아이디어 제시 △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옹벽 디자인 △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한 디자인
송산그린시티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의 특화학교 계획방향 제시 △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학교시설 방향 △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 및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내외부 공간계획

이번 공모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은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작품접수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가능하다.

작품심사는 7월 중에 진행되며, 전문가 및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기획 아이디어, 설계개념 등이 포함된 제출물(A3용지 5페이지 내외)을 평가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그 밖에 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책자 발간 등을 통해 해당 신진건축사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이 신진건축사들에게 기성 건축사 주도의 공공건축설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31,478, 9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13.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양도성 탐방' 운영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는 2014년 상반기 성인 대상 답사 프로그램 '서울 한양도성 탐방'을 5월 28일(수)부터 7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

이번 답사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인솔 및 해설과 함께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한양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임시개관(4.24.) 중인 한양도성박물관 전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한양도성 탐방'은 1회 신청 시 3개 코스가 3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 출발하여 낙산공원을 거쳐 혜화문에서 마무리하는 낙산코스(A)와 흥인지문에서 출발하여 광희문에서 마무리하는 흥인지문코스(B), 장충동에서 출발하여 한양도성 남산구간을 일부 돌아 장충단공원에서 마무리하는 남산코스(C)로 준비되어 있다.

교육신청은 5월 14일(수) 오전 10시부터 5월 21일(수) 오후 4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전화, 방문접수는 불가), 기수별로 40명(총 160명)이 추첨으로 선발된다. 신청희망자는 교육기간 중 참여 가능한 교육일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 프로그램 안내

구분	내용
교육일시	2014.5.28.~7.11. 매주 수·금요일 오후 3시~5시
모집대상	일반시민
모집인원	기수 당 40명
수강료	무료
교육방법	도보 답사(우천 시에도 진행)
교육시간 (2시간)	A: 한양도성 관령 강역(2층 학습실) → 한양도성박물관 관람 → 한양도성 남산 구간 → 혜화문 앞 B: 흥인지문 → 청계천 오간수문 터 → 이간수문 → 동대문역사관 → 광희문 C: 한양도성 남산구간 → 박문사 터 → 흥화문 → 수표교 → 장충단비

구분	내용
모집기간	모집기간: 2014.5.14(수) 10:00 ~ 5.21(수) 16:00 발표일시: 2014.5.22(목) 오후 17:00 ※수강 신청 미달 시 추가 모집



■ 서울 한양도성 탐방 사진

2014.05.13.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젊고 유능한 '최고' 건축사를 찾습니다!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大賞)』 공모... 5.30.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잠재역량에도 불구하고 경력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건축사의 설계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이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공모는,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완공작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대장으로 제출서류를 한정하여 신청자의 공모참여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제출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9월초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자에게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 장상 7명 내외)과 상패·동판을 수여하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홍보 지원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5.15.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울산시,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행 주제 ‘울산다운 안전한 도시디자인’...11월 18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울산다운 안전한 도시디자인을 위해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및 범죄예방과 관련, 다양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조적 품격을 더하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울산다운 안전한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범죄예방 공공공간 디자인 분야’와 버스승강장의 원래 기능에서 예술적 가치와 안전 기능을 접목한 ‘아트 버스쉘터 디자인 분야’로 구분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2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월 18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출품신청서, 작품패널, 작품설명서, CD-R(데이터) 등을 갖추어 울산시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대상(1명), 금상(2명), 은상(2명), 동상(5명), 입선(10명) 등 총 20개 작품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발표된다.

대상 500만 원, 금상 각 300만 원, 은상 각 150만 원, 동상 각 80만 원, 입선 각 2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12월에는 울산시청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모전 작품집도 발간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울산다운 안전한 공공공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예술적 창의성과 안전 기능을 포함하여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번 공모전 우수 작품은 향후 우리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과 공공시설물 시범설치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www.ulsa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052.229.4881)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15

.....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누구나 누리는 한옥’ 건축물 설계·사진으로 공감을 나누어요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3개 부문으로 작품 접수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며, 한옥준공, 한옥 계획 및 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공모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 관련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올해 계획부문은 '한옥 공공건축물' 계획안을 통해 한옥의 공공성 및 저변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며, 자격제한 없이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한옥을 피사체로 한 사진을 접수받으며,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응모가능토록 하였다.

준공부문 및 사진부문의 작품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며, 계획부문의 경우 작품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정에 여유를 두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발표한다.

각 부문별 대상 선정자(작)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주어지고, 그 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 및 상금(총 4,3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전시회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소개되며 작품집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옥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 공모전 계

획부문과 관련한 세부설명을 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에 서울 페럼타워(을지로입구역)에서 한옥공모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공모전 취지, 공모전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한 참여의 장인 이번 공모전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공공건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4.05.18.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 야간 산책 나오세요

근대문화유산 밀집지역의 야간문화 개선 및 볼거리·휴식 공간 제공

인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인 자유공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밝고 경쾌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야간 활동시간 증대에 따른 욕구 충족 및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로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근대문화 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중구 자유공원 일대의 역사성, 장소성에 부적절한 인공 구조물을 지양하고, 자유공원에 어울리지 않았던 일부 보안등도 근대 복고풍 디자인형태의 주물 보안등으로 교체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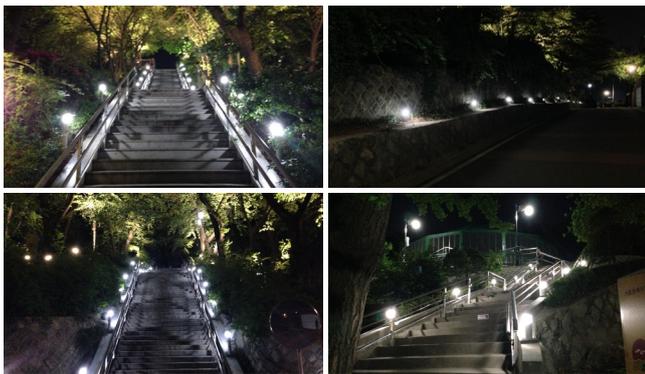
남부교육지원청~주민센터 구간에 시행된 이번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도로, 계단, 쉼터, 호국기념탑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을 조성해 편안한 야간 휴식과 산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경관심의 의견 반영과 함께 지역의 역사전문가, 디자인전문가의 수차례에 걸친 자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근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뒀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2009년도에는 자유공원 벚꽃 길 산책로 서편, 2010년도에는 자유공원 진출입로에 대해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김동빈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최초의 근대 공원인 자유공원에 시행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은 근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중구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최고이자 모범적인 야간 경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공원 야간 경관

2014.05.23.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제 3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충청북도가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걷고 싶은 길,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주

제로 ‘제 3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걷고 싶은 길’ 부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형 디자인으로, ‘살고 싶은 농촌’ 부문은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형 디자인으로 각 부문에 맞는 설계방향을 잡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등 4개 부문으로 공모분야가 확대됐다. 수상작 수도 전년보다 15점 증가한 45점으로 늘었으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오는 9월 17~19일까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pubdesign.cb21.net)에서 예비 접수하며, 예비심사결과는 9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본선접수는 10월 20~22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하고, 심사위원회의 활용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작품시상은 대상 2점(각 300만원), 금상 2점(각 250만원), 은상 5점(각 100만원), 동상 6점(각 50만원), 입선 20점(각 15만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수상작은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에 접목하여 디자인을 통한 지역특화 및 농촌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도청 대회의실에 전시하여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4.05.26.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녹색건축도시 부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구좌읍 동북리에 건설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에너지타운으로 조성

제주자치도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동북리 산 56 번지 일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월 1일 밝혔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2011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3년여 간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역 주민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 오다, 금번 최종 입지 선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정상 궤도에 올라 국고절충 및 신규 시설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좌읍 동북리 주민들은 4월 29일 주민 임시총회를 개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민 69.8% 찬성으로 입지 유치를 최종 결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4월 30일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동북리로 최종 선정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선정은 봉개매립장이 조기 포화가 예상되고 광역소각장이 노후되어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2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하여 그 해 12월 주민대표 및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2013년 7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정후보지를 5개 지역(동북 2, 봉개 2, 교래 1곳)으로 압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작년 말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개최 자체가 무산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선진 기술이 반영된 구미, 대

구, 울산 등 앞서 건립된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주민지원계획을 제시하여 후보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입지 선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건립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과학적인 시스템과 선진기술이 반영된 악취를 저감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립할 것이며, 쓰레기를 자원으로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또한 인근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건립하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세계적인 모범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자원인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소각장 500톤/일 및 매립장 20만㎡ 규모로 2018년 가동을 예정으로 추진된다. 금번 입지가 결정된 동북리 지역에 대해서는 565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계획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그 밖에 지역 발전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과 윈-윈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입지 위치도(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산 56번지 일원)

2014.05.0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상습채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채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채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채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 공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채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채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채불사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채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채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②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③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④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채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채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다.

2014.05.13.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비 50% 내 최대 30만 원... 첫 지원

서울시는 아파트 베란다에 손쉽게 설치, 한 달에 전기요금을 최대 13,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일) 밝혔으며,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8,000가구에 지원한다.

200~210W 모듈은 65만 원 이하, 250~260W는 68만 원 이하인 설치비의 50%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설치 후 고장 등이 걱정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 업체를 통해 5년 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04년 3가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주택의 옥상·지붕을 활용한 주택태양광 2,579개를 보급한 바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태양광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하루 3.2시간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를 통해 연결해 가정 내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용량은 대형 시설에 비해선 작지만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이고, 분산전원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발전용량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900L 양문형냉장고를 일 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약 292kWh)를 생산, 한 달 평균 최대 13,310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최소 30개월(3년)에서 최대 80개월(7년) 정도면 초기 설치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시가 작년 5월~12월까지 50세대에 250W 미니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연간 전기 사용량이 5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길어도 30개월이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서울 시내 아파트 중 베란다가 남향인 아파트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6월 20일까지 각 자치구 및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1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단체로 제출한 경우와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는 우선 선정 대상이다. 전체 선정 가구 중 5%는 일반 개인 신청자 가운데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등을 우선 배정해 선정한다.

아직은 미니태양광 시장이 걸음마 단계이고,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설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인 만큼 각 설비는 공인 성능검사기관과 설비 인증기관의 검사를 통과하고 시에서 마련한 미니태양광 보급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로만 공급할 계획이다.



■ 미니태양광 모듈 개발

녹색건축도시 부문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서울의 지역적 특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니태양광 보급 일정

2014.05.18.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속적·안정적 수익모델¹을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원기관(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환경·에너지·문화관광 등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마을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공급지역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이 단순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돈이 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최종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 대상지별 시범사업 개요

△ 광주광역시

-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 수익을 창출 계획
-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시, 20MW 규모, 국내 3위 규모
- 단계별 추진하여 연간 전기 판매수익은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 강원 홍천군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후, 도시가스화 하여 주민에게 공급
- 유기성 폐기물 활용하여 퇴비와 액비 생산,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 조성
- 퇴비·액비 판매수익금은 국민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 복지사업에 재투자, 태양광은 전기 판매 수익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 충북 진천군

- 현재 조성중인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술(전기 + 열)을 적용
-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 태양열·지열·하수열 등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단지 내 난방용으로 활용 계획
- 동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 통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 하고, 향후 유사 신도시 조성 시 보급 확산 기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강원 홍천·충북 진천 등 3개 대상지 및 추진계획 확정

남비(NIMBY)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21일(수), 녹색성장위원회는 제 4차 회의를 통해「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광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은 환경부가, 진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주관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진행

¹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협조·이전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 기금, 용자 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2014.05.21.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광주시, 정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 운정동광역매립장에 20MW급 햇빛발전소 설치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최종 후보지로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등 3개 지역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현장조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걸쳐 결정됐으며, 6개 지역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으로,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해 주민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됐다가 지난 2004년 12월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이 '친환경에

너지타운' 추진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판단돼 국무조정실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사업계획과 입지의 우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건의해 왔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유치로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에는 20MW급 햇빛발전소가 들어선다.

전국 3위 안에 드는 대규모 시설로, 연간 2만 6,280MW 전기를 생산하여 7,000여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1만 1,143톤을 감축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이런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90%를 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시설에 있어 다소 불투명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전량 구매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시·체험·교육과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체험 빌리지,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립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 구간에 인권생태 탐방로, 다양한 태양에너지 활용기술을 보여주고 지역민·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태양열 스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생태·인권·관광이 융합된 차별화된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 말까지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다.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본격 운영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수박, 가사문



화권 등과 연계할 경우 관광자원으로 지역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창조모델로 만들어 기피시설로 인식돼온 매립지를 돈이 되는 선호시설로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지난 2005년 2.6%였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2020년 20%까지 끌어올려 ‘에너지 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4.05.21.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홍천군 선정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제 4차 회의를 열어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3개 지역을 친환경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등을 친환경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홍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천 모델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천군 시범사업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해 판매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모델이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도시가스화해 주민에게 공급하는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전

국 확산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 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기금, 용자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

2014.05.22.

..... 강원도 녹색자원국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속 추진

상반기 60여 가구 신청... 올해 200가구 정도 혜택

울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전력 피크치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

은 90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 원(20㎡ 기준), 지열 15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상반기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 55가구, 태양열 4가구, 지열 1가구 등 60여 가구가 신청해 총 2억 6,000만 원(국비 2억 원,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울산시는 하반기 사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갖추어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82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최대 840만 원(20㎡ 기준)까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사후관리 및 계약분쟁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경제정책과(229.28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시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709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2014.05.27.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든다!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15.05.28.시행)은 다음과 같다.

①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하였으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 설치를 강화하였다.

②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유도한다.

④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 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용자 및 지자체 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5.2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인천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5.30일부터 250세대 선착순 접수, 세대당 최대 40만 원 설치비 지원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자립도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150~250W)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발코니가 남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 약 250세대에 세대 당 용량기준별 단가(60~80만원)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30일부터 시작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설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인버터, 난간거치대, 전력량측정기 등으로 구성된 세트이며, 가구당 1개 세트의 설비를 보급한다.

소형태양광 설비는 아파트 발코니 밖에 에어컨 실외기처럼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전자제품에 보급된다.

통상 250W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24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 달 전기료를 1만 원에서부터 1만 5천 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설치비 회수기간은 2.1년~3.2년이면 가능하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2014년도 소형태양광 지원 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주)마이크로발전소, (주)우

경일렉텍, (주)제이에이치에너지와 직접 설치 계약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정에 직접 설치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텃밭운동의 붐 조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모습

2014.05.29.

..... 인천광역시 녹색에너지정책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 낮춘 것 외에도 건축법상 완화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정기준을 완화항목에 포함시켰다.

기존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경은 이 항목에 없어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걸림돌이 많아 제도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정기준 완화 적용 등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정법 일부개정안은 5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5.01.

..... 경기도 도시재생과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 주도로

전남도, 마을 발전 과제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전라남도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를 발굴,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도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현장포럼은 기존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마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발굴해 마을 발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자주적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농촌 현장포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 교수와 농촌 활동가, 퍼실리테이터(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의 촉진자로서 과제분석 또는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사람)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공동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다만 이들 전문가 그룹은 진행 위주의 조력자 역할만 할 뿐 모든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마을 발전 주제를 발굴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한 도내 36개 마을 중 15개 마을의 발전 계획이 우수 사업계획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5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개(전국 350개) 마을이 선정돼 지난달 강진읍 장동마을과 성전면 장등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당 4회씩, 총 220회의 포럼을 운영한다. 목포대학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며 △주민 역량 강화 △마을 주제 발굴 △현장 견학 △마을 발전 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등을 교육한다.

강진읍 장동마을 1회차 농촌현장포럼에서는 사전에 조사·분석한 마을의 자연 경관, 농수특산물, 음식, 문화재, 마을 역사, 전설, 축제

등 유·무형의 마을자원과 주민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마을을 진단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정리했다.

장동마을은 다른 마을처럼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3가구가 귀농하는 등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이다.

최광수 마을 대표는 “이제까지는 행정이 주관해 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마을 발전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며 “포럼에 마을 주민 40명이나 참석하는 등 마을과 주민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고 있어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통해 발굴한 우수 마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4.05.06.

.....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꾸오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손잡아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²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²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가 '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3천㎡이며, 이 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3,375㎡임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말농장 조성 전경

2014.05.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³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 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³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09.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도시 활력 증진사업 적극 추진

도시 활력 증진지역 '15년 신규 사업 발굴 13개소 872억 원,
천사마을 거점센터 '15년 말 준공·개관 목표로 추진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2015년 신규사업 13개 사업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내역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해피빌리지 사업, 3단계 주거환경개선 11개 구역 등 13개 사업 872억 원이다.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 500만 관광객의 원도심 유인 및 보행순환을 위하여 전주시 중앙동 풍남문~감영~객사 구간, 영하의 거리~KT&G~기린오피스텔 구간

에 전통과 현대문화 창의거리를 조성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바닥포장, 경관조명, 시설물 및 조형물, 지중화, 습터조성 등 환경정비와 스토리텔링 사업이며, 신규 사업에 선정되면 2015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원도심 확산을 위한 보행 순환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해피빌리지 사업은 전주시 완산동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업이다.

해피하우스센터가 주거지 재생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지금까지의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서 지역·공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폐공가를 활용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6동), 경관도로 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3년간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3개 구역 중 금년도에 착수한 2개 구역을 제외한 기자촌2 등 11개 구역, 712억 원을 신청하였다.

사업은 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소로, 주차장, 녹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자력으로 개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한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사마을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도 정상궤도에 올라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 지역의 ‘얼굴 없는 천사’를 테마로 전국최초의 사회 통합적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착공함에 따라 '15년 말 완공 목표로 본격 추진하여 선도적 재생사업의 가시화 및 완공시 또 다른 도시재생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과 더불어 지난 4월 선정된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이어 정읍, 김제, 완주 등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도시재생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4.05.08.

.....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재해안전도시, 도시계획에 달렸다!

5월 10개 도시 선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⁴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⁴ 기후, 지형, 특성(인구, 불투수율, 건축 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지역별 재해취약등급(Ⅰ~Ⅶ등급)을 도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5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본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5.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년 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

국토면적 여의도 27배 증가, 지역별 면적순위 등 국민 궁금증 해소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4년 지적통계연보⁵'를 발간한다고 12일 공식발표했다.

⁵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의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등 현황을 수록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78km² 증가한 100,266km²(13년 말 지적공부등록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국토의 등록면적에 비해 여의도의 223.7배인 649km² 증가한 것이다.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 등록(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간척지 준공 30.8km²)이 가장 컸고,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및 산단조성(1.2km²)이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 조성 (30.8km²)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⁶의 현황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⁶ 도시(재)개발, 경지정리 등이 완료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 지난 30년간 도로 117.2% 증가, 농지 12.3% 감소
- ※ 국토의 32.4%가 국·공유지,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지속증가
- ※ 수치지역, 국토 면적 대비 4.7%(4,711km²)로 꾸준한 증가세

또한, 우리나라 극단지역 및 여의도 등의 현황을 재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별 면적순위를 함께 수록하여 지역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토의 1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19,028.9km²)가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464.9km²),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km²), 가장 작은 곳은 부산 중구(2.8km²)로 조사되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포털,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2014.05.12.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5.14.(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14.~3.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 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지난 9일(금)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⁷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 하였다.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조합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에 교육을 이수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약 47%가 정비 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74%가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정비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⁷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5.12.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한다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 원인 :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어
- 피해 :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 원인 :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 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 피해 :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 원인 :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 피해 :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

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반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중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5.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00호 공급

서울시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호를 모집한다. 이번 100호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백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5월 26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을 우선 배정하여 총 50호를 배정하고, 잔여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16.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벽화·조형물 체계적 관리 돌입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디자인(벽화, 조형물)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 디자인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등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마을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인 벽화와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시설물인 만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계획 수립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월 시, 구·군 마을만들기 사업



으로 형성된 벽화와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벽화는 총 126개소, 조형물은 35개소가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벽화는 동구와 부산진구, 조형물은 사하구에 다수가 분포하고, 설치시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마을 디자인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디자인 시설물별로 관리대상 비치, 년1회 정기점검, 주기적 청소, 수시보수를 실시해 관리하며 새로운 마을 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인근대학(예술학과)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도모해 나가며, 마을경제, 마을발전계획, 역량강화교육 등과 더불어 민·관 협치를 통해 마을 디자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벽화의 경우 벽화 색채, 내구성 등 벽화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으로 채색(페인트) 벽화는 최소화 하고, 타일 등 기타 부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평면적 벽화에서 입체적 벽화로 전환함으로써 벽화의 지속성과 예술성, 조형성도 부각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디자인 시설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마을 디자인 자문단'을 도입한다. 자문위원은 '부산시 공공디자인 분과위원' 중에서 일부 선정하며, 창조도시 기획과장, 도시경관담당관,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마을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디자인 시설물의 미적조화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 디자인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마을의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부산의 마을 만들기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4.05.16.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구분	현행	개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조성원가(80~95%)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 변경
(현행)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변경)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20% 범위 내 조정 가능)
단,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최초 택지공급 공고 후 6개월 내 미 공급 시 용지 전환
(현행)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
(변경)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 가능

이번 조치로, 타 개발 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수료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 △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대상
(현행)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
(변경)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
- △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 매입 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 요청 가능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
-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 △ 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기준 완화(165㎡→140㎡)
- △ 공립학교용지 공급가격
-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
- △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내년 1월 1일 시행)
(현행) 한국 감정원과 대형 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
(변경) 수행능력 등 일정 자격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 종교시설용지에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종합의료시설' 용지-'의료시설' 용지로 완화
-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 △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점
(현행)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함께 협의·결정
(변경)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 △ 사전준공 전 합동검사 지적사항
(현행) 관리청 이의 없을 시 인계인수 완료로 판단
(변경)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5.19.

..... 국토해양부 신도시택지개발과

광주시, 도시 경쟁력 높인다

인본민주도시 등 6대 분야 12개 실행과제 추진... 선진 도시 이미지 구축

광주광역시와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선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시 경쟁력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실행과제는 6대 분야에 핵심과제 12개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시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6대 분야, 12개 과제 개요

6대 분야	12개 과제
인본민주도시	△ 인권도시 지정 추진 △ 교통사고 전국 최저수준 감축
문화예술도시	△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 △ 5대 전략콘텐츠 특화 육성
경제기반도시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 첨단기술 금형산업 육성
녹색환경도시	△ 저탄소 녹색실천운동 추진 △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
국제중심도시	△ 세계적 광주 비엔날레 개최 △ 5대 유망 관광시장 육성 및 마케팅 강화
첨단과학도시	△ R&D특구 개방형 연구·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 가전로봇 특화 육성 2단계 사업 추진

특히, 이번 계획에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5 광주 국제 디자인총회 등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제중심도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실행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킥 퍼런스, 국제 포럼 등도 개최하고,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한편, 광주시는 도시경쟁력 요소를 발굴해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제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14.05.19.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미래 건축정책 중장기 계획 윤곽 잡혔다

19일 '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충남도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도 관계자,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올해 10월 수립 예정인 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연구내용 및 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 건축정책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 고유의 경관창출 △녹색건축 기준 및 제도 정비 △녹색건축 관련 사업 지원 △건축문화자산 및 지역 유희시설 활용방안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지도 제작 △지역 건축사 활용 및 발굴·육성 등 핵심추진 과제를 단기 수행가능 사업과 장기 진행사업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문단은 향후 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축 관련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관련부서 담당자를 고려한 실행계획 작성 매뉴얼, 프로세스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앞으로 주민 공청회, 도정책자문

회의, 시·군 담당자 의견 및 관련사업 참여의사 수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전문가 TF 회의(9회), 별도 자문회의(2회), 충남 건축사회 공청회, 건축위원회 자문(1회) 등 관련 계획의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안건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문화, 주거환경개선, 친환경도시 구축 등 관련계획 세부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0조'에 의해 광역차원의 중·장기 건축정책 및 녹색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된다.

2014.05.19.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우리 동네에 갤러리가 생겨요!

주례 산복도로 응벽이 갤러리로 바뀐다

부산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 공간 마련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산복도로 갤러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례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갤러리 조성사업은 1억 7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주례여중 사거리 도로변에 갤러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갤러리는 응벽에 타일 벽화 방식으로 110m가량 조성되며, 9월 준공될 예정이다. 디자인은 주례동의 역사적 유산인 냉정샘, 주례동의 과거와 현재의 마을 전경, 사상팔경의 독특한 이미지와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한 그림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갤러리 조성에 필요한 그림을 공모한 결과 1,300여 점이 접수됐으며, 시는 참여 작품들을 디자인해 부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갤러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례지역에는 산복도로 갤러리 조성사업 외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 년도 사업으로 △300년 역사가 숨 쉬는 냉정샘 복원 프로젝트 △노후 측구 정비 및 한평공원 조성 △주례로 골목계단 특화사업 △주민 제안 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 용벽 갤러리 조성(전)



■ 용벽 갤러리 조성(후)

2014.05.20.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폭풍·폭설에 대비

지난 2월 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PEB(Pre-Engineered Building)구조⁸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 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4년 3월~4월에 걸쳐 건축물 도면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과 기둥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중 78동(시도별 5동)을 표본 추출하여 샘플점검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황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⁸ 힘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단면 부재를 사용한 철골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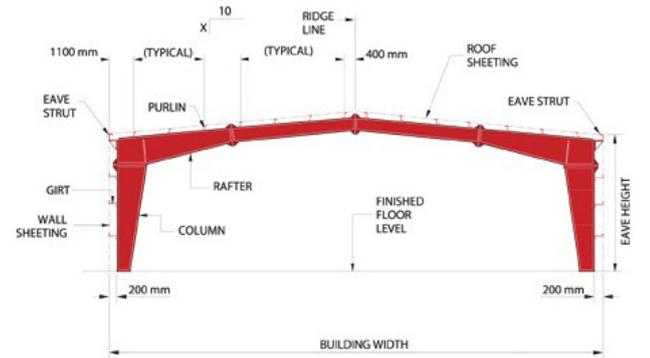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여 즉시 시행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PEB 구조·건축물

2014.05.2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마을을 되살리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1주년 라운드테이블 개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5월 22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주년의 기대와 성과, 부산 마을 만들기 진단 강연, 주민·활동가·전문가·네트워크 자원·행정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펼쳐 96명이 마을활동가 교육인증과 활동인증을 받았으며, 28개 마을공동체 주민 58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대학 개설로 6개 팀 77명 교육수료와 더불어 좌천동과 주례동은 국토교통부 통합 발표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마을공동체별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가, 활동가 등을 파견해 주민·활동가·행정 등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소식지(꿈, 부산마을!) 500부를 발행해 부산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 배부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로 마을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마을공동체 55회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협동조합 3곳 설립, 마을기업 1곳 인증을 받았다. 컨설팅은 마을공동체별 요구 내용에 맞춰 전문 컨설팅 자문단 17명

을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행정과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6개의 기초단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고, 기초민간협의체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광역민간협의체가 10월경 창립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일자리,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단체와 자원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 태양광 발전시스템 무상지원, 청년 자원봉사활동, 업무 및 정보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3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했고, 마을공동체의 기대와 성과가 높아 올해는 115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 4월부터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먹거리, 텐트 및 의자 등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으로 6곳의 마을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부산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 만들기 주체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어 앞으로 지원센터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참여 형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4.05.21.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부산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활권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

부산시는 5월 26일부터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에 수립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태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공동체 관리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하구를 시범지역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에서 정비용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생활권 계획은 주민이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을 단위로 생활권을 구분해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지의 정비·보존·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군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내년 5월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게 해제하되,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4.05.21.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 건설기술자 등급체계 및 최초교육 변경사항

- △ 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 (현행)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 :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 기술 인력 수급의 불균형 초래
 - (변경)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
 - 단, 기존보다 등급 하락 시 불이익 방지 위해 기존 기술자 등급 인정
-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 (현행) 업무 시작 후 3년 이내 이수, 3주 교육시간
 - (변경) 업무 개시 전 교육, 2주 교육시간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업역을 신설하였고,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기술자 보유인원 및 자본금 기준)은 완화하였다.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신설)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일반 (신설)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 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 안전관련 규제 변경사항

- △ 인명피해 발생 시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강화
- △ 안전관련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 대체 불가
- △ 안전진단 선정 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 △ 시특법상 1·2중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시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 의뢰
- △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 실시 대상 개선 (1·2중 시설물 공사 + 일부 일반시설물 공사)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⁹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가점)으로 산정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3.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소규모학교 공동주택 건립사업 성과 두드러져 공동주택 건립 후 5개 농촌학교 학생 수 142명(61%) 증가

제주자치도가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난 '11년부터 '13년까지 소규모학교 학구지역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마을 학교의 학생 수가 당초 232명에서 61%가 증가한 374명으로 나타나 공동주택건립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소재지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생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자치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82세대를 건립하는데 35억 원을 지원하였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애월읍 남읍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애월읍 광금초등학교, 성산읍 수산초등학교, 구좌읍 송당초등학교, 애월읍 하가리 더덕분교 등 이들 5개 소규모학교는 외부에서 초등학교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통폐합의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의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의 결과가 학생 수 증가와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에도 8월 중에 공모를 통하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자구노력을

하는 마을을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23.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전남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업무협약 전국 최초... 연간 5억 원 예산 절감·신속한 도민서비스 가능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되는 최신 공간정보(항공사진·수치지형도 등)를 전남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전남도가 시군에 재배포, 타 용도 사용 등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군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시군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했다.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 개발사업, 연구 지원 등 목적을 달리해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공간정보 사용에 큰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3.0’가치 실현을 위해 도 보유 공간정보를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5.24.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가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동북리 지역주민과 협약 체결

565.3억 원 주민지원 및 친환경적인 시설 건립 약속

제주자치도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된 동북리 주민들과 주민지원계획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동북리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간에 협약서를 체결 교환한다.

가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입지 확정에 따라 제주자치도, 제주시, 동북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주민지원계획에 따라 총 565.3억 원이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소득창출 사업에 지원되며 그 밖에 동북지구 배수개선사업, 동북초등학교 살리기 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북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구좌읍 동북리 주민들은 4월 29일 주민 임시총회를 개최, 주민투표 결과 69.8% 찬성으로 입지 유치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4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북리로 입지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광역소각장 1일 500톤 및 매립장 20만㎡이상 규모로 2018년 가동을 예정으로 추진되며, 인근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건립하는 풍력발전단지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4.05.07.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19) 손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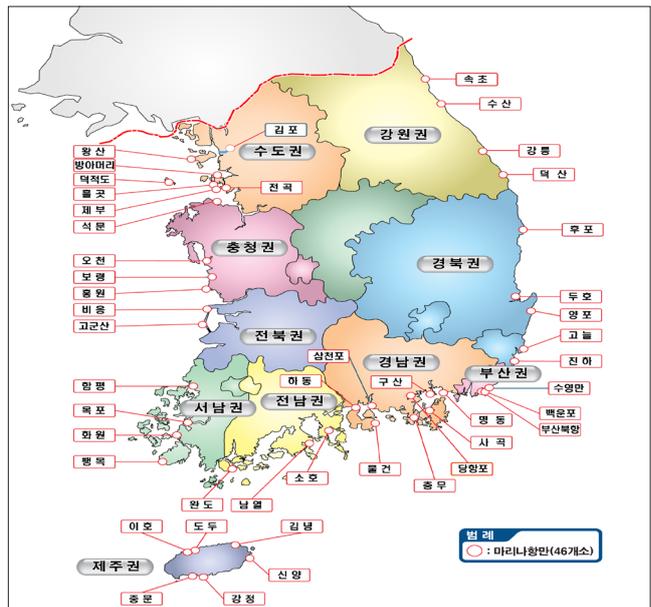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지난 4년간의 해양 관광 환경 변화와 해양 레포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4년째인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마리나항만 대상지의 여건 변화 및 개발규모를 재검토하고, 민간투자자 개발수요 및 해양 레포츠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상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대상지 검토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 제출된 자료(93개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마리나항만 내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리나항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마리나항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정작업을 통해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보완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마리나허브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된 밑그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마리나항만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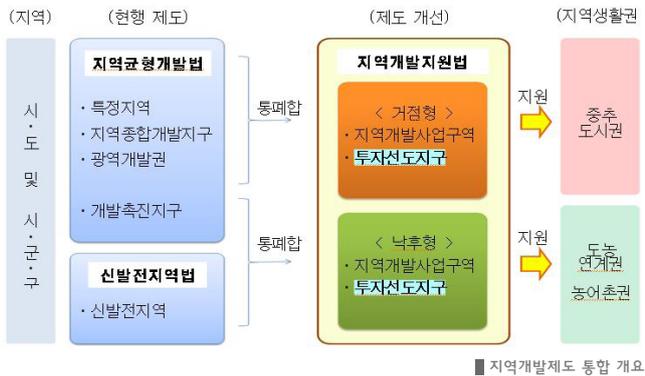
■ 제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46개소) 위치도

2014.05.26.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유사·중복된 각종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각종 지역·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일원화 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

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선도적 추진이 필요한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종합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규제특례, ② 조세·부담금 감면, ③ 용지매입비 용자 등 자금지원(시·도), ④ 기반시설 지원(정부), ⑤ 인허가 원스톱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15년 상반기),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15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 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 강화를 강화한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5.27.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올해 11.2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 의무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도입(자연재해 예방)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이의신청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건축 관련 분쟁조정 업무 일원화

■ 건축 관련 분쟁조정 업무 개정안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분쟁	△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시·도)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시·군·구 건축허가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건축 민원 행정서비스 질 상승)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⑦ 실내건축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14.05.2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융복합 관광산업
‘복합리조트’ 추진 탄력**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청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안)에 대해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4.5.26일자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하였다.

이번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으로 람정제주개발(주)에서 2018년까지 약 2조 5,600억 원을 투자하여 싱가포르의 리조트월드센토사에 비견되는 세계적 수준의 가족형 복합리조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방문 관광객 1천 5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2,519천㎡)에 외자유치를 통해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월드테마파크와 MICE시설, 테마스트리트,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로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JDC에서 시행하는 J지구(1,467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신화, 역사, 문화를 토대로 한 신화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금까지 수차례 도민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사업시행 변경 승인 조건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합테마파크 운영인력의 80% 이상은 도민을 우선 채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게 50% 이상 우선참여기회 제공 △건축공사는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월드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우선 착공 △교통개선부담금(49.4억 원 상당)은 1단계 복합테마파크 사업 착공 전에 납부 완료 △유니버설스튜디오형 월드테마파크에 제주신화를 테마로 하는 테마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문화 등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람정제주개발(주)에서 2조 5,600억 원이 투자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건설단계에서 약 6조 9,700억 원, 운영단계(사업개시 후 20년간)에서 약 23조 4,5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제주 경제의 총량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특히 복합리조트에 약 7,600여 명의 상시 직접고용 등 안정적 일자리 약 2만 여개가 제주에 새롭게 탄생하면, 지역주민 및 도내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이와 연관되는 고용유발효과도 건설단계에서 약 4만 명과 사업개시 후, 운영단계에서 약 14만 명이 발생하는 등 제주경제에도 획기적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이 복합리조트 유치로 관광객 유입도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주경제의 GRDP 20조원, 도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우량자본의 투자유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5.27.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민자 공원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 추진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자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현행)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개정)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 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현행) 민자 공원 조성 시 8회의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

(개정) 자문과 심의를 3회로 단축/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 포함

(개정) 감정평가서 생략, 기본설계를 기본구상도로 대체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공모제 도입

(현행) 민간이 공원 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
(개정)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할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 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 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05.28.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4.05.30.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 해제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결정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5월 29일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사근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며,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4개 구역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6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덴마크 건축정책(2007)

김영현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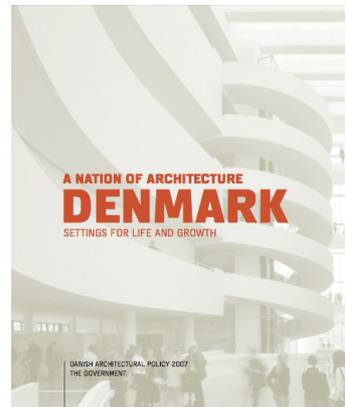
덴마크는 1994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996년도에 제2차, 2007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덴마크 건축정책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건축정책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서문과 주요 건축정책 10대 목표영역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본문, 관련 추진기관별 역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건축정책의 10대 목표 및 주요 내용은 건축물 품질 확보에 관한 사안이 주를 이루며, 건축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사항,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진 건축국가이기에 높은 수준의 건축산업 및 교육수준 유지·강화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며, 건축산업 및 기술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잘 정리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덴마크의 10대 건축정책 목표와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을 살펴보고, 국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내용 구성

덴마크 건축정책에서는 국가의 건축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별 건축물뿐만이 아닌 국토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접근과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덴마크가 우수한 품질의 건축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임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별 주택에서 국토계획, 교육 및 글로벌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 덴마크 건축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문화부(ministries of Culture), 경제부(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사회부(Social Affairs), 외교부(Foreign Affairs), 환경·교통부(Environment and Transport) 에너지부(Energy),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 등 다양한 부처가 건축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건축정책의 비전 및 10대 목표

덴마크 건축정책 비전

덴마크 제3차 건축정책의 비전은 크게 2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우수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삶을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산업을 덴마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육성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및 시공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제시장에서 덴마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목표

건축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10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 확보, ② 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③ 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④ 건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⑤ 정보보호 조 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⑥ 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⑦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발, ⑧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⑨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⑩ 건축관련 연구의 수준 확보

주요 계획내용

①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 확보

공공건축물은 도시이미지, 시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로써 우수한 품질의 공공 건축물 조성,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건축을 비롯한 각종 플랜트, 고속도로, 교량 등 다양한 공공구조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주요 공공시설 발주기관에서의 건축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기관¹⁰의 역할 강조
 - 기능성에 초점을 둔 교육 및 연구시설, 국방시설의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 자산관리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이용자 수요, 건물의 전생애주기, 보존 가치 등의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
- 공공부문에서의 투입비용 대비 품질요구에 대한 수준 향상
 - 2007년 공공사업의 비용대비 품질확보를 목표로 '건설정책 실행계획' 수립(경제부 주관)
 - 비용대비 향상된 건축품질 또는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분야의 건설 효율성 제고
- 정부 턴키계약에 의한 건축물 품질 확보
 - 턴키계약의 품질기준, 적용범위 및 비용기준 등에 대한 개선
- 건축정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교류 확대
 -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를 중심으로 건축 및 건설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건축정책에

¹⁰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별 건축정책 수립

대한 컨퍼런스 개최 및 관련 부처건축정책 동향을 분석한 연차보고서 발간·배포

- 지역건축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지역 건축사회, 건축가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컨설팅 제공(지역건축정책 템플릿 구축)
 - 문화부 주관으로 매년 지역에서 건축품질을 도모한 사업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 운영 예정

② 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덴마크 건축물의 92%는 민간소유로 국가 전체의 건축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개별 주택의 증·개축 시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건축정책만으로는 민간부문의 건축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민간업체간 디자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건축물 이용자인 시민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수준높은 품질의 건축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축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각종 전시, 교육, 가이드투어, 세미나 등을 통한 인식 확산
 - 덴마크 건축센터 DAC 주관으로 국제 건축전시 기획·운영, 중요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지역 시민대상의 기초건축교육 확대
- 덴마크 경관의 주요요소인 단독주택에 대한 디자인 선도사례 발굴 및 카탈로그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 기초적인 기술기준에서 기능과 품질 요건을 추가한 건축기준 고도화

③ 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새로운 시공기술은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에 대한 발전이 필수조건이다. 건설자재 및 시공기법의 혁신은 건축에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3D 디자인 툴 개발로 인해 과거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하학적인 복잡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건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산

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 공공주택 및 공공건축사업 부문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서의 디지털화
- 건축 및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준의 글로벌스탠다드화
- 건축설계 신기술 및 디지털 툴에 대한 지식 보급
 - 건축 및 건설부문의 디자인화는 건축센터 DAC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전시 및 워크숍 운영
- 건축 전문교육에서 디지털 툴에 대한 교육 강화
 - 대학 건축전공 학생, 건축교육 기관을 비롯한 기존 건축가들의 디지털 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전개
- 공공사업 입찰 시 건축물에 대한 연간 유지비용 산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 건설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체계 구축
 - 건축 품질 향상을 좌우하는 요소로써 건축자재에 대한 혁신과 개발은 필수적이며, 건설자재 산업에 건축관련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유도

④ 건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우수한 품질의 건축은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접근성, 지송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실내 환경은 적정 자재 선택을 통해 조성될 수 있으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고려되어 한다. 건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경성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건강 증진에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외부 도움 없이 복지시설에 접근이 용이하고,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천연자원 소모, 건축폐기물 최소화에 신경써야 하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건물 내 습기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축기준 마련
 - 2007년도에 국가기업 및 시공위원회(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는 새로운 BR07 기준을 발표하여 건물과 자재의 최대 습기 수치가 시공문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
-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확대 및 사업 운영
 -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을 중심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선 및 적용 확대사업 추진
- 기존 건축물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금 운영
 - 신축시설의 경우 현재의 건축기준에 의해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이 보장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경우 개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2년간 DKK 3,000만(한화 약 56억 원) 지원 예정
- 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25~30% 절감 기준 강화
 - 대규모 시설 개축, 지붕, 창문, 보일러 등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개선, 에너지 라벨링(Energy Labelling), 보일러 및 환기시스템 검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준
 - 친환경 건축물 ‘스완라벨 빌딩’제도 도입(Swan-labelled building)
- 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 유도
 - 환경부 주관으로 저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둔 국토계획법(Planning Act)을 개정하여 지역 내 신 개발단지에 저에너지 건축물을 요구 및 유도하는 지역계획 조항 추가

⑤ 정부임대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1960-80년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임대주택은 대규모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저급한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사회주택법(Consolidation Act on Social Housing), 도시재개발 및 개발법(Act on Urban Renewal and Urban Development)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덴마크 도시재개발법(Danish Urban Renewal Act)에 따라 임대주택 개발 및 도시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매년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 의해 신규 사업 추진
 - 시범사업 테마는 건축의 기술적, 기능적,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시설 접근성,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주거환경 취약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조사
 - 주거취약지구에 대해 해외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 촉진
 - 덴마크 건축가협회 주관, 관련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 주거취약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의 참고자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 실시
- 도시 재개발 관련 교육 강화
 - 오르후스(Aarhus) 건축학교는 덴마크 사회부 지원을 통해 신규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건물 파손, 시민 참여, 노후시설 스톱에 대한 건축교육 실시

⑥ 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도시계획은 대규모 건축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 일상생활의 질, 건축품질에 대해 결정적인 여건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 자연, 인프라간 상호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기본요건으로 건축정책에 있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 레알다니아(Realdania) 재단과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지자체 구조 개편 이후 도시계획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6-09년 3년 간 'Plan 09' 프로젝트 추진

- 근린단위 환경 및 항구지역에 대한 컨설팅 운영

- 쇠퇴해 가는 항구도시의 재생은 새로운 도시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서 수변 접근성 확보 및 문화·여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 주체로 관련 지자체에 도시계획 컨설팅 제공

- 조경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New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ning)

-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계획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조경계획의 새로운 방법(the landscape grading method) 및 툴 제공

- 랜드마크로서의 풍력 발전기

- 2007년 3월 정부는 지상 풍력 발전기 계획 위원회(Committee on Land-based Wind Energy Planning)의 보고서¹¹를 승인
-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모전 기획·추진

⑦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다양한 덴마크 건축물 및 구조물은 국가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별 건축물은 덴마크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따라서 정부의 문

¹¹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인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필요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

화유산 보존정책과 건축정책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건축물에 대한 개조 또는 증축 시 원래 구조의 건축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al Heritage Agency)에서 매년 건축 전문가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¹²

- 건축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
 - 매너 하우스라 하여 옛 영주의 저택에 대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DKK 600만 예산(한화 약 11억 2천만원) 확보
- 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가
 - 문화부 장관은 덴마크 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사회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대상 추가적인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 결정
- 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지도 제작
 - 국가문화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총 400,000동 이상의 건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며, 최근 덴마크 내 주요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지도 발간
 - 문화유산 지도에 건물, 도시 및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서 문화적 유산의 개념을 개별 건물로 국한시키는 것을 방지
- 건축문화유산 보존 관련 교육 강화
 - 건축물 복원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복원 분야에 대한 새로운 건축산업 및 인력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

⑧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덴마크 경제는 점차 지식서비스, 디자인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건축분야

¹² 국가문화유산위원회에서 역사건축물의 개조 및 증축 허가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건축 전문인력이 역사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

는 덴마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큰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분야이다. 그간 덴마크 내 건축 사사무소들은 폭 넓은 해외시장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규모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건축산업의 해외수출 잠재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해외 수출 여건 조성을 통해 덴마크 건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제적인 전시 기획

- 덴마크 건축 및 디자인 홍보를 위해 DAC와 덴마크 디자인센터(Danish Design Centre)는 2007-2010년 간 국제적으로 투어(travelling exhibit)하는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동시에 덴마크 건축 기업들의 홍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용
- 덴마크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국가로 최근 2차례의 비엔날레에서 시상한 바 있으며, 비엔날레는 덴마크 건축 및 건설 수준을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 제공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국제 건축 비엔날레 및 전시를 벤치마킹하고 건축 전시를 지원하며 수출 홍보하는 역할 수행

- 외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덴마크 건축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덴마크 건축 산업 홍보를 위한 공동 캠페인 지원
- 외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BornCreative」¹³ 프로그램에 건축 및 시공 기술 수출 관련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운영

- 국제시장과의 교류 및 홍보 확대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2006년 북경 건축 비엔날레 이후 중국과의 교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진건축가 간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덴마크 건축, 디자인, 공예를 홍보하기 위해 DAC, 덴마크 디자인 센터, 덴마크 공예

¹³ 컨설턴트의 역할은 고용인 50인, 수익 DKK 5,000만 미만(한화 약 93억원) 덴마크 중·소규모 건축 사무실들이 국제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Danish Crafts)에 의해 「Danish Edge」라는 영문포털 및 소식지 제작

- 외국 건축 전문인력의 취업기회 보장
 - 해외 건축가의 고용은 새로운 지식 축적과 전문인력 및 상업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가능
 - 덴마크 건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외 건축인력의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분야는 「job card」 프로그램에 의해 외국인들의 즉각적인 취업 및 거주 허가가 가능한 고용 분야로 지정

⑨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덴마크 건축산업의 활력 및 혁신을 위해 신진건축가들의 재능과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우리나라 턴키 발주제도의 문제와 유사하게 특정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지명경기(closed competitions)가 증가되어 공개 공모전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¹⁴

- 와일드 카드 프로그램 운영(New wild card scheme)
 - DAC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시장 접근성을 고려한 공모전 참가 촉진 관련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보 캠페인 운영
 - 국제적으로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명한 유로판(Europan)에 참여 유도¹⁵
- 신진건축가를 위한 여행 보조금 지원
 - 건축교육 졸업자 또는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및 기업적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여행 보조금 지급¹⁶

¹⁴ 덴마크 건축가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클로즈드 콤피티션 운영은 증가한 반면 공개 공모전은 지난 5년 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

¹⁵ 유로판(EUROPAN)은 40세 미만 유럽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공모전임

¹⁶ 여행 목적은 전문성과 관련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덴마크 건축 마케팅의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고, 문화부 디자인 보조금 지급 사업실행 일환으로서 특히 중국과 뉴욕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⑩ 건축관련 연구의 수준 확보

덴마크만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건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건축교육은 타 국가에서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에 기반을 한 덴마크식 건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건축학교 내 자문이사회 설치를 통한 실무와의 협력 구축
 - 건축실무와 교육 및 연구분야 간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 도모를 위해 건축분야의 선도적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건축교육에서의 실무적인 자문 수행
 - 건축교육 기관에 비즈니스 박사과정을 설립하여 산·학 연계 증진
- 건축교육의 국제교류 확대
 - 덴마크 건축교육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교육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교육자, 학자 간 국제적 교류 증진
 - 해외 교수, 교환 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증진

정책 관련 정부부처 및 조직, 기관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 문화부, 경제부와 함께 레알다니아 재단으로부터 예산지원¹⁷을 받아 운영되며, 건축의 문화적·상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건축 관련 전문적인 연구 이외에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전시, 회의, 컨퍼런스, 교육,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덴마크 예술재단(Danish Arts Foundation) 덴마크 예술재단에 소속된 건축위원회(Committee for Architecture)는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3년간 장학금, 취업 및 여행 보조금, 시상보조금 등을 운영하며 매년 DKK 750만(한화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

¹⁷ 레알다니아 재단은 2005년 DKK 210만(한화 약 4억 원)에서 2007년 연간 DKK 1,240만(한화 약 23억 원)의 예산 지원

1994년에 설립된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은 스포츠, 문화, 여가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포츠 및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 운영, 발주업무 수행 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은 국립 복권기관인 'Danske Spil'로부터 매년 DKK 8,000만(한화 약 15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al Heritage Agency)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목표는 건축, 선사시대 기념물, 박물관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보존 및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건축분야에서의 문화재 등록 및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건축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된 시설의 복원, 개조 등은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원회 위원은 주로 건축시설 복원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